

# 올 석탄발전 30% 줄인다... 미세먼지 2838톤 저감 기대

**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총 53기 중 8~16기 가동정지  
전력 공급능력 110.2GW 예상  
예비전력10.1GW 이상 유지

정부가 올 겨울 한파 예고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의 최대 30.2%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2838톤 감소 효과도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돼 전년(2020년) 87.6~90.4GW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W 대비 약 3GW 많은 수준이다. 기준 기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인 -9.0℃를 적용한 결과다. 산업부는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110.2

GW로 예상되며,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해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겨울 LNG 가격과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최소 8기~ 최대 16기를 가동정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석탄발전을 감축한다. 이 경우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12월~2019년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속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관리에도 나선다. 공공부문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을 강화해 선도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추진한다.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해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요 송배전 서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 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해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일관성’ 비상근예비군 소집으로 예비戰力 강화해야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  
“군, 비상근복무 소집 변경 잦고  
예비역 병장직위 신규편성에  
상당수 예비역소령 사실상 퇴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예비전력 정예화상’이라는 주제로 ‘학·군·연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하지만 예비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해온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이번 세미나가 탁상공론에 머무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비전력 정예화의 주역, “군 당국 정책 믿지 않는다”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은 ‘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군 당국과 정부의 ‘갈광질광 정책’으로 실재는 과행에 가깝게 추락해 신뢰성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모 동원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A 예비역 대위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복무자가 직장 등 현업을 유지하며 성실히 소집에 응할 여건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출결에만 매달리는 실상이 매우 거북하다”며 “코로나 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에도 소집일을 1주일 정도 코앞에 두고 수차례 변경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랐던 예비군의 날 홍보 포스터. /국방부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지난해에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마저 일반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면 중단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소집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올해는 단 1회 소집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동원지원단 소속 B 예비역 소령은 “내가 소속된 동원지원단의 경우, 6월에 예정된 소집이 11월까지 연기되다 결국은 올해는 소집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80일 복무의 ‘평시복무 예비군’에 예비역 병장직위가 신규로 편

성되면서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예비역 소령이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현실 파악 못해 숙련예비군 확보어려워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사기와 대군 신뢰성 저하가 팽배해 있음에도 국회 국방위 등 정치권은 비상근예비군의 소집을 저하를 예비군 개인의 사정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10월 2일 프레스이안의 보도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

년 동안 당초 예정된 15일의 예비군 훈련 일수를 모두 이수한 비상근 간부예비군은 전체 10~17%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복무가 어려워지거나 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무 해지 심사제도 외에 훈련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운용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투잡예비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예비군이 180일 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2개 법안의 개정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 다수의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은 ‘예비군 숙련성 저하’를 우려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예비군을 계속 나이정년과 상관 없이 만 60세까지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편성하자고 했던 개정안은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던 제391회 국방위위원회 1차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석면해체’ 하도급 금지 기준미달업체 등록 취소

고용·환경부, 제도개선 방안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하청업체에 맡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면 해체 업체는 등록이 아예 취소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관련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석면 해체 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철거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에서 대폭 줄어드는 소위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반드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 석면 해체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석면 해체 업체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 석면 해체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에는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뒀다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석면 해체 작업을 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운송 특수장비 임차 입찰담합 2곳 과징금 3.4억

공정위, 세방·동방 투찰가격 결정

종합 물류기업인 세방과 동방이 화물운송 특수장비 임차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세방(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중국 엔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 (2014년12월23일),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2016년1월26일, 2017년12월19일) 등 3건의 입

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이를 위해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2014년 중국 입찰의 경우, 동방과 세방은 모두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두 회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

고 장비를 1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 세방이 낙찰받은 이후 이를 실행했다.

2016년과 2017년 국내 입찰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고자 했고, 세방과 동방은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은 물량 중 장비비 1대 1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